

새정치, 때 이른 지역위원장 공천경쟁 불붙나

조강특위 구성...친노·비노 물밑 대결 본격화

‘공석’ 광주 서 울, 순천·곡성 위원장 선정 관심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구성을 마감에 따라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

조강특위에서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 선정을 주도하고 선출된 지역위원장은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대의원 선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위원장 자리는 차기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노와 비노 진영의 치열한 물밑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공석인 순천·곡성과 광주 서 울 지역위원장에 누가 선정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일단 조강특위 구성은 외관상으로 친노와 비노의 비율이 ‘50 대 50’ 정도로 짜여지면서 비교적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주승용 의원과 이윤석 의원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주 의원은 김한길 전 대표, 이 의원은 박지원 의원 계열로 풀이된다.

조강특위는 이번 주 1차 회의를 갖고 지역위원장 선입과 관련한 내부 규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선 실시 여부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도 지역구 내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경우,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역 국회의원이 공석인 지역은 경선이 불가피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위원장 재선입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 새정치연합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경선을 통한 지역위원장 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에서는 광산 울과 서구 갑, 서구 을, 북구 을 등이 경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

으며 전남에서는 순천·곡성과 영암·장흥·강진, 고흥·보성 등의 지역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경선 지역구 선정과 단순 지역위원장 선정을 놓고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친노와 비노 진영의 치열한 물 밑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경선 방법도 관심사다. 지역위원

장 경선 방법이 차기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가 아닌 당직선거라는 점에서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참여를 100% 하는 방안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 시민 참여와 모바일 투표도 거론하고 있다.

조강특위는 다음 주부터 지역구 실사를 통해 후보 확정과 함께 경선이 필요한 지역은 예비 후보 압축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다음 달 중반까지는 지역위원장 선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친노와 비노 진영의 정면충돌 등이 빚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특히 비노 진영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상당한 결집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민집모’(민주당의 집결을 위한 모임)과 ‘구당구국’ 모임 등을 통해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비노 진영의 모 중진 의원은 “중도 비노 진영의 취약점은 결집력”이라며 “친노가 당을 좌지우지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비노 진영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감 브리핑

박혜자 “문화재 발굴 사업비도 영남지역 편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새정치·광주 서구 갑)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권역별 문화재 발굴사업 횟수 및 발굴사업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 발굴사업의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말 기준, 전체 658회 발굴사업 중 32.2%인 212회가 영남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총정액은 102회(15.5%), 호남은 63회(9.6%), 경기도는 115회(17.5%), 서울은 118회(17.9%)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사업비 또한 전체 약 506억원 중 영남지역이 39.7%인 201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총정액은 74억원(14.7%), 호남은

76억원(15.1%), 경기도는 68억원(13.4%), 서울은 35억원(7.0%)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재 발굴사업이 경상도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경상도 이외 지역의 문화재 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광주·전남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허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큰 곳이 1000곳이 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 돼 있을 뿐 지정고시 등 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나주·화산)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산사태 취약지역은 광주가 139곳, 전남은 1103곳에 달했다. 하지만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곳은 광주는 단 한곳도 없으며, 전남도 370곳(34%)에 불과했다.

산림청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태조사해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뒤 지정·고시해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4201곳이 취약지역이

며 가운데 지정·고시된 곳은 45%인 6436곳이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전국 산사태 피해면적은 1833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 정부지원 복구비 1650억원 등 모두 3309억원이 투입됐다. 인명피해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 의원은 “산림청이 일선 지자체의 조력제정, 지정위원회 구성과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정률이 낮다고 해명하지만 실태조사에만 연간 20억원이 투입해놓고 지정고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감 중반...세월호·‘초이노믹스’ 대충돌 예고

이완구 “민생·경제에 중점” vs 우윤근 “정부 적폐 전면전”

2주째로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는 세월호 참사 문제와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을, 여당은 ‘폭격있는 국감’을 각각 이번 주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여야 간에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중반 국감 전략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혁을 위한 작업에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주차 국감은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라며 “제2의 IMF 사태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재벌 특혜와 반민생, 부자 감세와 서민 중세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반 국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 책임 소재, 정부 후속 조치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격전이 불가피하다. 해양경찰청·감사원·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이를 수사 또는 조사해온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이번 주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1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조합·한국선급, 해양수산부 국감은 이른바 ‘세월호 국감’의 백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법무부(13일), 감사원(15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16일)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 국감에서도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의 수사와 유병언 일가의 재산 압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상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13일 예정된 안전행정부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세월호 단원과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수사 상황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부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세월호법 등 협상 속도내나

여야가 이번 주부터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 법 등 3가지 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 지 주목된다.

법안 처리 기간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3가지 ‘패키지법’을 지난달 30일 합의한 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이번 주부터 야당과 협상 노력을 벌이겠다”고 밝혔으며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번 주말에 협상팀 구성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미 국회 TF를 구성한 세월

호특별법과 달리 정부조직법과 유병언 법을 상임위에 맡겨 놓을 경우 국감 일정 때문에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별도의 TF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에서 먼저 법률안을 만들고 상임위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여야가 행사하는 특별법 사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의 참여 문제다. 지난 합의에서 여야가 ‘유족의 참여를 추후 논의한다’고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경찰청의 폐지안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남해안 절경을 찾아서

이순신해상선배

www.knnews.co.kr
www.이순신해상선배.kr

제6회 **충무공 이순신 제독 승전해역 순례**

2014년 11월 1일(토)
오전 8시 ~ 오후 5시

충무공 이순신 제독 승전해역을 우리 군함을 타고 순례하는 전국의 참가자 400명을 모집합니다. 남해안 천혜의 절경도 감상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상: 전국민, 초등학생 이상 400명
※ 5회 참가자 제외

접수 및 입장: 2014년 10월 17일까지
[문의처] www.knnews.co.kr
www.이순신해상선배.kr

선정: 신청자 대상 추첨 선정 (지역별, 가족·단체별 고려, 인원초과 시 예비후보 선정)
※선정자 추후 문자 및 홈페이지 공지

문의처: (055)210-6100 ~ 4

함정: 독도함
※ 자세한 사항은 순례안내를 통해 자세히 알으세요

주최: 02경상남도
03경남신문
후원: 04부산광역시, (사)21세기 이순신연구회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5층 참조은인파
4층 한길통증의학파
3층 신한은행
2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010-2007-8848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5,000만원 경품 1,479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대상 ·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이상 신청, 기존 유지 고객
응모권교부조건 ·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경품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쿠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8등	아차상	1200명

※ 동급 사은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등까지는 참석한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KBC광주방송국 앞
양림지점 652-9203 기독교병원 아래
월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 사거리